

## 9.28 노동당 조직정비의 의미와 정책방향

**최진욱**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Online Series CO 10-37

북한은 9월 28일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하고 당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당대표자회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이미지와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김정은은 신설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위원장인 김정일 바로 밑의 2인자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김정일 이외 누구의 그늘에도 가리는 것을 원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은에게 후계자의 위상을 부여하면서도 실질적 역할은 맡기지 않았다. 이는 김정일의 권력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등 보다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의 위상을 성급히 부여한 것은 김정일의 건강이 그만큼 나쁘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셋째, 김정일의 친족들과 최측근 실세들이 최고 지도부를 장악하였다. 절대권력자의 측근들은 절대권력자가 건재하는 한 직위 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접근성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절대권력자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사정이 다르다. 당 경공업 부장인 김경희는 대장 칭호를 부여받고 정치국 위원을 차지하였으며, 황해북도 책임비서 출신인 최용해는 대장 칭호를 부여받고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 중앙군사위 위원 자리를 차지하였다. 당대표자회 직전 외교부 제1부부장에서 부총리로 승진한 강석주는 정치국 위원이 되었다. 이들 측근들이 서둘러 고위직을 차지한 것은 김정일 이후를 대비한 것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2인자로까지 간주되며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이 예상되었던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인 장성택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장성택의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견제를 받은 것인지, 스스로 몸을 낮춘 것인지 의문이다.

넷째, 군부의 세대교체가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국방위원회 수뇌부인 조명록 총정치국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중 조명록만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였으나 중병중이기 때문에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나마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탈락하였다. 오극렬은 당재편 과정에서 어떠한 직책도 받지 못하였으며, 김영춘은 정치국 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이영호 총참모장과 상하관계가 역전되었다. 반면, 평양방위사령관에서 총참모장에 오른지 1년밖에 안된 이영호가 차수로 승진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군 인사중 당의 최고 위직에 올랐다. 그 밖에 당대표자회 직전 대장으로 승진한 부총참모장 최부일과 8군단장 현영철,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우동측과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된 작전국장 김명국, 경찰총국장 김영철, 해군사령관 정명도 등이 군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다섯째, 선군정치 중심이 국방위원회에서 당으로 이동하였다. 정치국 정위원 17명중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5명에 불과하였고, 정치국 후보위원 15명중에서는 4명 뿐이다. 김정은이 당을 통해 등장하고 측근 실세들도 국방위원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에 진입한 것도 당의 기능 강화에 기여하였다. 김정은, 김경희, 최용해, 김경옥 등 민간인에게 당의 지도부에 진입하기 전에 대장 칭호를 수여한 것은 당 지도부도 군사 칭호를 달고 있다는 모양새를 연출하여 선군정치의 지속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 이후를 대비하여 후계체제를 성급히 구축하고 권력재편을 단행하였으나, 앞으로의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하다. 우선 김정은이 어리고 경험이 없으며 권력기반이 전무하다는 것이 김정은 후계체제의 취약점이다. 김정은의 공식 등장 하루만에 공개된 김정은 사진은 김정은의 부족한 자질을 만회하기 위한 애처로운 노력이었다. 선천적 비만 체질 덕분에 젊은 시절 김일성의 복고풍 헤어스타일과 인민복으로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었던 것에 그나마 북한지도부가 크게 안도하였을 것이다. 김정은의 권력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실세그룹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나, 권력의 생리상 이들이 김정일 이후에도 김정은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후계체제가 안착되기 전 김정일이 급작스럽게 퇴장하게 되면 권력기관간의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치방식의 측면에서 선군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인적 통치이다. 즉, 제도를 무시하고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조직지도부, 행정부, 통전부, 총참모부,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외교부 등 당·정·군의 주요 기관을 직할 통치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이라는 콘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 기관들은 구심점 없이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당조직 개편의 의도 중 하나는 김정일 일인에 의한 통치를 당에 의한 집체적 지도로 대체하려는 것이었으나, 당의 지도부를 장악한 김정은의 후견인 그룹이 군에 대한 당적 영도를 강화하려할 경우 당·군관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국과 비서국이 정비됨으로써 향후 이들 회의체의 기능

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회전반에 당적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은 김정일 시대의 유흔을 철저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후계체제의 안착을 위해 대내결속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김정은 공식 등장 직후 핵무기 포기 불가와 핵능력의 강화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의 불만을 누르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외 긴장을 조성하는 익숙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한편, 북한 지도부가 부족한 정통성을 만회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동인은 김정일 시대보다 더 클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 의존하거나,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원을 확보하려 하거나, 미·북관계 돌파구 마련 시도를 해보는 등 다양한 옵션을 타진할 것이다. 그러나 새 지도부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군부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도 북한 지도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